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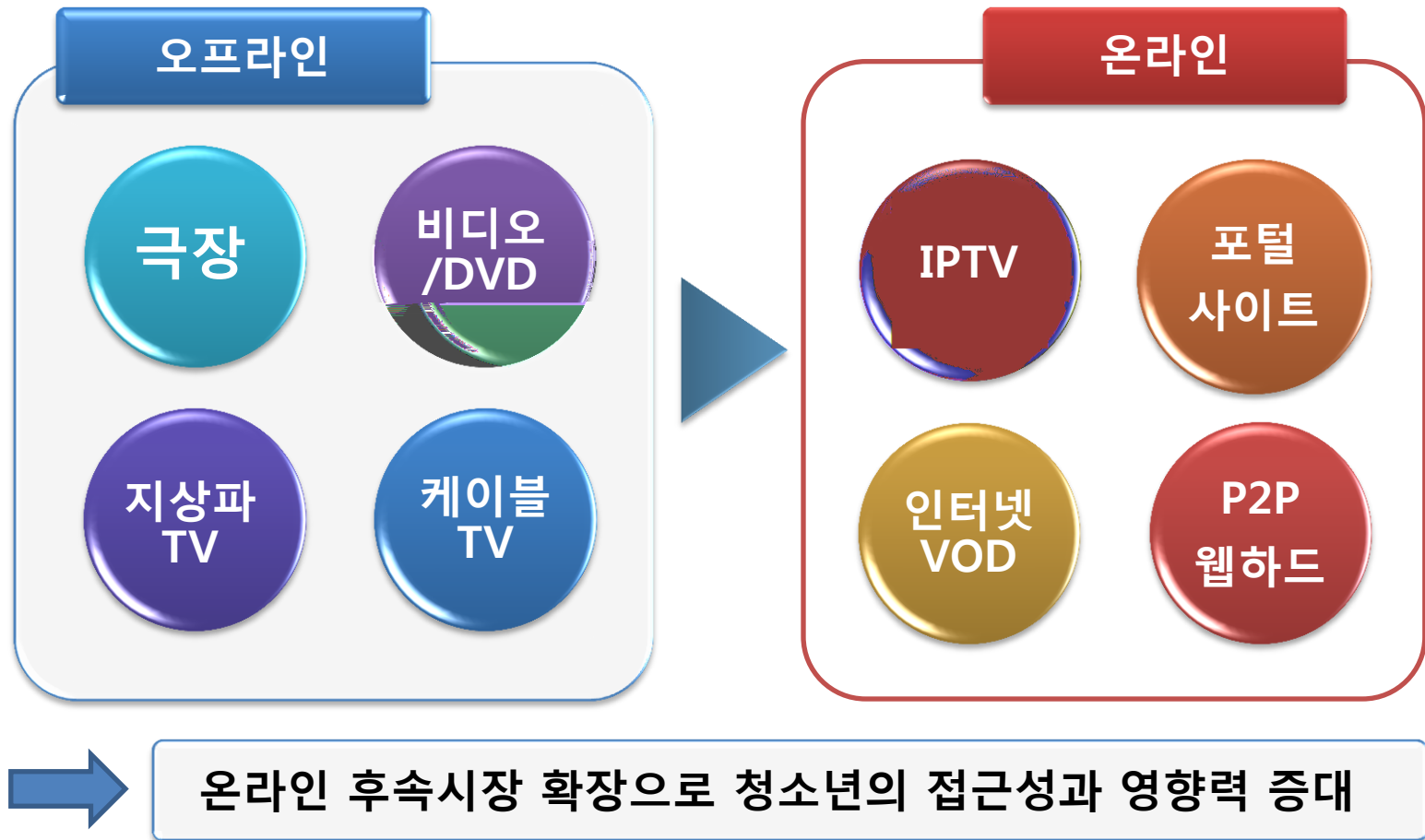
영상물등급분류에 대한 이해집단별 인식 연구 : 영화등급분류를 중심으로

2012. 11. 3

발표: 김미라
(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)

연구배경

▣ 초고속인터넷, IT 기술발전에 따른 영화의 제작 및 유통환경 변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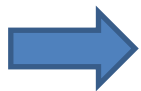
연구배경

등급분류신청 영화의 증대

- 2011년 등급분류편수: 764편(전년대비 37.8% 증가)
- 국내영화 214편(전년대비 31.7% 증가)
- 국외영화 550편(전년대비 40.6% 증가)

국외영화의 <청소년관람불가>등급 비율이 40.7%로 압도적

- 극장 상영보다 IPTV나 인터넷 VOD 유통을 주목적으로 하는 성인영화가 증가
- 전체 국외 영화중 일본영화가 157편(28.5%)이었는데, 이 가운데 111편(70.7%)가 <청소년관람불가> 등급



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영등위의 영상물등급분류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사회적 논의 확산

연구 배경

영상물등급위원회와 영화 등급분류에 대한 논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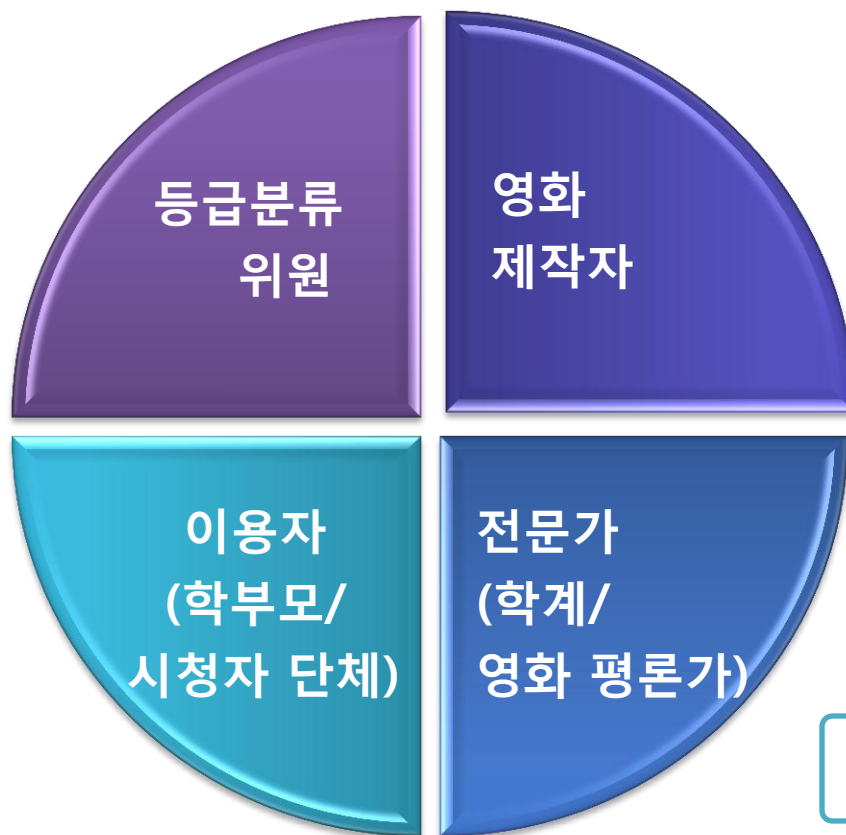
- “디지털 환경에서 방대한 양의 영상물과, 극장이라는 공간을 규율한다는 것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어 민간(업계)자율심의가 효과적일 수 있다”
- “후속시장에서의 등급과 유통을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안전망이다”
(영등위의 2011년 영상물 등급분류에 관한 국민반응 여론조사결과 인터넷 동영상물의 등급분류가 적정하다는 비율은 4.2%로 매우 낮았으며, 등급분류 강화가 필요한 분야라는 답변이 63.4%였음.)

2012. 10월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갈등

- 제한상영가 등급 논란: 사전검열 논란
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풍자한 독립영화 ‘자가당착: 시대정신과 현실참여’의 <제한상영가>등급 판정에 대해 민주통합당 유승희의원 ‘정치적 검열’ 주장
한국독립영화협회, 행정소송 제기 및 기자회견
- 등급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: 민병훈 감독의 영화 <터치>에 대한 <청소년 관람불가> 판정에 대한 감독과 주연배우들의 반발
▪ <루퍼> <위험한 관계> 등 수입영화의 <청소년 관람불가> 판정에 중국, 미국보다 보수적 잣대라고 우려

연구 목적

영화등급분류와 분류주체인 영등위에 대한 각 이해집단들의 인식과, 상호 갈등을 일으키는 영역을 분석함으로써 등급제가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합의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



<그림 1> 이해집단

면대면 심층 인터뷰

- 인터뷰 기간: 2012. 9. 17~ 10. 15
- 인터뷰 대상: 13명
등급분류위원: 3명/ 영화제작자: 3명/ 이용자: 3명/ 전문가: 4명
- 연구자가 문헌연구와 언론보도를 통해 대표적으로 논란이 됐던 이슈들에 대해 질문하고, 조사대상자가 다른 이슈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도록 했으며, 인터뷰 내용은 녹음하여 분석에 활용
- 주요 질문영역
 - 등급분류 주체에 대한 인식: 민간자율심의 등
 - 영화등급분류 기준 및 전문성, 공정성에 대한 인식
 - <제한상영가> 등급에 대한 인식
 - 등급분류제도의 절차에 대한 인식(재분류 및 이의신청 등)
별도의 재심위원회 또는 배심원제도 도입 등 절차의 민주성 문제

연구 방법

심층 인터뷰 대상자 명단

집단 구분	분류	성별	연령	소속
분류기관(A)	A-1	남	58	등급분류위원
	A-2	여	50	등급분류위원
	A-3	남	51	등급분류위원
제작자(B)	B-1	남	65	영화감독
	B-2	여	48	영화감독
	B-3	남	41	제작자단체 대표
이용자(C)	C-1	여	55	학부모단체 대표
	C-2	여	59	시민단체 대표
	C-3	여	45	시민단체 대표
전문가(D)	D-1	남	54	학계
	D-2	여	50	학계
	D-3	남	48	영화평론가
	D-4	남	44	영화평론가

연구 결과

등급분류주체: 민간자율규제에 대한 인식

분류위원(A)

- 책임 있는 공적 기관이 해야 하고, 민간자율규제는 시기상조
 - . 결과에 대한 책임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아 혼란 우려
 - . 제작자들의 사회적 책임감이 전제돼야 가능한 일로 믿기 어렵다

제작자(B)

- 업계 자율규제로 가더라도 위원을 영화계뿐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으로 구성하면 객관성, 공정성 담보
 - . 주체는 영화제작관련 협회나 단체 등 대표성 있는 기구가 맡아야
 - . 재원은 공적 영역의 일을 하는 것이므로 당분간은 정부 지원이 필요

이용자(C)

- 민간자율규제로 가는 순간 거버넌스 기능이 무효화 될 우려가 있고, 현행 영등위 체제가 안전
 - . 그 동안 업계가 좀더 책임감과 적극성을 보여줬어야
 - . 업계자율로 간다면 방송처럼 사후심의, 규제가 전제돼야

전문가(D)

- 궁극적으로는 민간자율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시기가 문제
 - . 영상물이 가지는 예술성, 창작물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제작자들이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질 때 민간자율이 긍정적
 - . 이용자들의 의식, 그리고 유해한 영상물에 대한 불매운동 등 시민사회와 언론의 적극적인 감시와 관여가 따라줘야 제대로 정착

연구 결과

영화등급분류기준 및 전문성, 공정성에 대한 인식

분류위원(A)

-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위원들로 전문성, 공정성 담보
 - . 제작단계에서 등급기준 고려 안하고 관행처럼 낮은 등급 신청, 어떠한 경우도 불만은 제기
 - . 분류기준 자체도 세분화되고 심의과정에서 점차 맥락을 고려하는 방향으로
 - . 영화에 대한 전문성 주장은 납득 안돼..., 영화의 예술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의 입장에서 적정 연령을 평가하는 것

제작자(B)

- 궁극적으로 위원들의 전문성과 철학이 문제
 - . 기준을 세분화해도 결국은 적용의 문제, 전체적 맥락하에서 판단해야 하는데 위원들의 마인드와 편향성이 문제
 - . 영화의 장르별 특성도 있는데 이해가 부족하고, 청소년 보호에 방점을 찍어 선정성이나 폭력 등 문제장면 위주의 심의로 흘러

이용자(C)

- 현행 등급의 세분화와 기준의 상향 조정 필요
 - . 전체관람가, 12세 관람가 사이에 취학 전 아동을 구분, 7세 등급 신설 필요
 - . 사회 분위기 탓인지 등급 기준이 관대해진 경향, 청소년 보호 위해 상향돼야
 - . <도가니>의 경우 사업자들 15세 요구했지만 실제 본 사람들은 <청소년 관람불가> 판정, 잘했다고 평가해

전문가(D)

-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나 위원 구성 문제는 재고할 필요
 - . 다양한 시각을 견지한다는 차원에서 각 분야를 아우르다 보니 위원들이 진영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폐단도..., 성향에 따라 같은 판정이 나올 가능성 있어
 - . 학부모의 입장에서 가족의 가치만 내세우다 보면 영화의 문화적 색채 실종,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워
 - . 영화계가 그 결정을 받아들일만한 인적 구성 필요하고, 영화계도 공모과정 등에서 적극 추천해야

연구 결과

<제한상영가> 등급에 대한 인식

분류위원(A)

- 영상물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윤리, 공공성 위해 필요
 -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성인들에게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영상물을 보지 않을 권리도
 - 포르노가 불법인 이상 현행 법과의 충돌도 고려해서 유지돼야
 - 성인대상 제한은 불필요하고 사후 형법 등 실정법으로 처벌 검토할 수도

제작자(B)

- 성인 대상물을 규율하는 것은 청교도적 과잉 규제
 - 영등위가 <제한상영가>를 고집하며 판정을 내리는 것은 등급 분류를 정보 서비스보다는 심의, 검열로 보는 하나의 반증
 - 성인들까지 누가 누구에게 제한을 둘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..., 포르노가 불법인 상황에서 그런 영화를 등급 신청하는 경우 거의 없어

이용자(C)

- 상영관이 없다고 해서 <제한상영가>를 풀자는 건 어불성설
 - <제한상영가>는 일반 극장에서의 상영을 금지하는 것도 있지만 청소년들의 접근을 통제할 수 없는 후속 창구에서의 유통을 제한하는 효과도
 - 상영관이 없는 것이 문제라면 그것은 제작자협회나 극장협회 등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

전문가(D)

- 성인들의 권리 규제, 표현물의 유통금지 측면에서 폐지 검토
 - 기본적으로 성인들이 볼 수 없는 영화라는 것은 없다, 그 사람의 성향이나 수용 수준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..., 법적 논란도 계속돼 왔던 만큼 문제가 되는 작품은 사후 관련법에 의해 처벌하는 방안 검토
 - 과도한 표현수위의 영화를 극장에 가 볼 사람들 거의 없고, 대중적인 상업영화보다는 예술영화나 독립영화들이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도 무방

연구 결과

등급분류제도 절차의 민주성에 대한 인식 (재분류 및 이의신청 등)

분류위원(A)

- **별도의 재심위원회 구성, 실효성이 의문**
 - . 현행 영등위의 분류절차상 전문위원, 소위원회를 거쳐 재심의 경우 등급위가 판단하는 3심제인 셈인데 여기서 해결이 안된다면 위원회 자체가 문제
 - . 별도 위원회 역시 구성문제가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다.
 - . 다양한 시각을 가진 위원들이 현재도 판정,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

제작자(B)

- **재심 신청 현실적 제약 많고, 결과 신뢰할 수 없어**
 - . 마케팅과 홍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개봉일자가 잡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영등위가 문제 삼은 내용을 수정해서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
 - . 하급기구인 소위원회 결정을 등급위원회가 번복할 이유가 많지 않아 결국 신뢰할 수 없어..., 재심뿐 아니라 <제한상영가> 등급 확정 절차도 보완 해야함.

이용자(C)

- **사회적 합의를 위한 절차의 민주성 확보는 바람직**
 - . 사업자가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거나 사회적 논란이 있는 작품의 경우 배심원제 도입으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어
 - . 논란이 되는 경우 영상물등급위, 제작자,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것도 바람직...

전문가(D)

- **영등위와 업계의 갈등 해소, 객관성 담보를 위한 절차 개선 필요**
 - . 영등위가 외부의 인력을 활용한 절차 보완을 위원회 자체의 권위나 전문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인식부터 버려야
 - . 이용자 관점에서 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20대부터 다양한 연령, 학력, 직업 등을 가진 배심원제 도입 검토해야...
 - . 미국의 등급항소위원회와 같은 별도 기구 심의 도입, 전문성 보완해야

민간자율규제로의 전환은 가능한가?

◆ 산업계의 성숙도와 인적, 물적 자원의 문제

- 미국의 MPAA 등과 같은 강력한 구심점이 없는 상태에서 등급분류주체 선정의 문제와 필요한 예산 총당의 한계 (2011년 영등위 전체 수입 중 등급분류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24.1%로 2010년 한국기업평가원의 분석결과 국고보조 없이 자체 수수료로 총당할 경우 국내영화 500%, 국외영화 243%의 수수료 인상 불가피 전망)

◆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 및 규제 의 실효성 문제

- 영화 등급 자체가 영화제작, 배급사들의 매출액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업체 자율심으로 갈 경우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한계
- 민간자율규제의 이상적 모델로 꼽히는 미국의 CARA의 경우에도 재원의 상당부분을 의존하는 메이저 영화사들에게 유리한 등급 판정을 한다는 논란이 계속됨. 우리의 경우에도 일부 메이저 투자배급사들의 영향력을 어떻게 배제할 수 있는가가 과제
- 규제의 실효성 측면에서 업계 자율의 등급 판정이 문제가 될 경우 이해 주체들의 충돌문제 해결 방안, 사후 조치방안 등이 전제되었을 때 전환 가능(방송프로그램의 경우 방송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등급을 부여하지만 방송내용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엄격한 사후심의와 이에 따른 제재를 하고 있음.)

결론 및 논의

영상물등급위원회 체제를 전제로 한 개선방안

◆ 이해집단들과의 갈등 해소와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절차 개선

- 영등위가 규제기구가 아닌 대국민서비스 기관이라는 인식 확산을 위해서도 절차의 민주성 확보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
- 재심과정에서 공정성 확보를 통한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해 영등위와 독립된 별도의 등급항소위원회를 신설하거나, 형사재판 등에 도입된 배심원제 도입을 적극 검토
- 등급항소위원회의 경우 구성과 운영과정에서의 시비가 또 논란이 될 수 있고, 이용자 중심의 등급제로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도 배심원제 도입이 더 바람직
- 배심원제의 적용 범위
 - . 사업자가 등급 결정에 불복, 재분류를 신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경우
 - . 등급분류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첨예한 특정작품에 대해 위원장 직권으로 회부
예) 2011년 영화 <도가니>
 - . <제한상영가> 등급의 경우 실정법과의 충돌과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의 문제 때문에 유지돼야 한다면 제작 및 수입업자가 감당해야 하는 손실이 큰 만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영등위의 등급분류 이후 배심원제를 활용, 객관성을 담보한다면 효과적인 설득기제가 될 것임.

◆ 등급분류기준의 정기적 개정 필요: 시대 변화에 따른 가치 등 반영

- 산업계, 이용자, 전문가 등 이해 주체들이 참여하는 TF팀의 상설 운영

디지털 환경에서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

◆ 규제의 실효성 측면에서 영상물 제작자, 이용자 교육기능 강화

- 영상물의 온라인 유통시장 증폭으로 방대한 영상물에 대한 등급 분류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용자 스스로 영상물을 선택하고 올바르게 수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및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 강화
예) 인력과 자원 확보를 통해 현행 '청소년의 영상물 건전 이용 프로그램' 등을 확대 실시
- 영상물 등급분류 위원들과 영상 산업, 제작업계 관계자들과의 워크숍 등을 정례화하여 상호 간극을 극복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함.

◆ 네덜란드 미디어 등급분류기관(NICAM)의 제도 활용 검토

- 등급분류기관은 사무국의 역할을 하며, 등급분류는 방송사 혹은 영화사에 소속된 코더들이 고유의 등급분류 시스템인 컴퓨터

영화 희망등급과 결정등급의 차이

2011년 영화 **희망등급과 결정등급 일치율**을 살펴보면

- **국내 영화**에서 희망등급과 등급 분류 결정이 일치된 경우는 **64.4%**(138편)
- **국외 영화**에서 희망등급과 등급 분류 결정이 일치된 경우는 **74.7%**(411편)

로 나타나고 있음.

Thank you so much.